

Global Goings-on

부족해 보이는 연금 개혁 70 or bust

- ▶ 은퇴를 생각하던 사람들은 크루즈 여행과 정원 돌보는 일을 앞으로 몇 년간은 보류해야 할 듯
 - 인구고령화와 줄어드는 투자수익으로 인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할 날이 더 길어질 수도
- ▶ 이런 고통스런 진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뉴스도 아니며 많은 정부들이 고령화 문제는 이미 다루고 있어
 - 이들은 공공연금의 비용을 억제하면서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있어
- ▶ 가장 과감한 연금 개혁도 부족해 보여
 - 정부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을 유지해야 할 것임.
 - 이를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고용주, 근로자 모두 태도를 바꾸어야 해
- ▶ 1971년 이래 부유한 세계의 65세 노인의 평균수명은 4~5년 증가해
 - 2050년까지 3년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
 - 지금까지 사람들은 증가된 햇수를 여가에만 활용해
 - 2010년 OECD 평균 은퇴연령은 63세로 1970년의 은퇴연령보다 1년이 낮아
- ▶ 만약 노동력의 공급이 계속 증가한다면 더 오래 살고 더 일찍 은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님.
 - 그러나 점점 추락하는 출산율로 인해 2050년이 되면 미국에서는 한 명의 연금 수급자를 2.6명의 근로자가 책임져야 되며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1.9명, 1.6명, 1.5명을 책임져야 해
 - 결국 문제로 뒤덮인 연금제도를 젊은 층이 떠받쳐야 해
- ▶ 대부분의 정부들은 이미 정년을 연장할 계획
 - 미국은 67세까지, 영국은 68세
 - 일부 국가들은 행보가 느려
 - 벨기에는 여성의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으며 바꿀 계획이 없어

- 각 정부들의 현 정책 하에서는 2050년까지의 평균 정년은 여전히 65세 미만으로 2차 대전 후의 정년과 거의 다를 바 없어
- ▶ 수명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- 부유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수명을 한 달 정도씩 더 얻고 있어 - 미국과 영국의 연금개혁 계획도 충분해 보이지 않아
 - 유럽의 경우 은퇴 연령은 2040년까지 70세로 올려져야만 해
 - 좀더 젊은 인구를 갖고 있는 미국은 유럽보다는 조금 더 낮은 은퇴연령도 가능해
- ▶ 오래 일하는 데는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어
 - 첫째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햇수가 늘어난다는 것
 - 둘째는 정부의 세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연금지급액이 줄어든다는 것
 - 셋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게 됨에 따라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
 - 노령 근로자들은 그간 무시되어 온 소비자 시장
- ▶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을 걱정거리로 생각하지 기회로 보지 않아
 - 일부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을 것에 대해 염려해
 - 경제학자들에게 “노동총량의 오류”로 알려진 이 잘못된 이론은 한 때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고 모든 일자리는 가장인 남성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사용돼
- “노동총량의 오류”를 맞는 이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해
- 구성원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상하는 사회가 변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 터무니없어
- 만약 노동총량의 오류를 맞는 이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면 정년을 25세로 낮춘다면 우리는 모두 크로이소스처럼 부자가 될 것
- ▶ 많은 근로자들이 공식 정년 전에 은퇴하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일부일 뿐
 - 워싱턴 DC 소재 Peterson Institute of Martin Baily와 Jacob Kirkegaard는 유럽인들의 실제 은퇴 연령을 공식 정년까지 올리기만 해도 향후 20년간 인구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해
- ▶ 이러한 상쇄 효과가 나타나려면 근로 관행과 태도가 변해야
 - 서구의 관리자들은 나이 든 근로자들의 근로자질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어
 - 육체적인 근로는 나이가 들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지만 현대의 경제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육체의 노쇠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
 - 나이 든 사람들은 반응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많은 경험과 보다 나은 대인기술을 보유해

- 물론 언젠가는 이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이들의 임금도 생산성의 하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해
 - 나이가 들수록 승진하고 보수가 증가하는 전통적인 장년세대시스템은 바뀔 필요가 있어
- ▶ 민간 부문에서는 연금제도의 막대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
- 새로운 근로자들과의 연금계약에서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고 있어
 - 그러나 공공 부문에서는 여전히 표준 방식으로 남아 있어
 - 최근 Hutton경은 기 발생된 근로자의 권리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연금 수급권은 국가 정년과 근무기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을 제안해
 - Hutton경의 제안을 따를 경우 남용과 파트타임 근무가 더 용이해질 것임.
- ▶ 공공 부문 연금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해
- 연금 기금 적자가 아마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듯
 - 미국이 영국의 선례를 따르는 데는 헌법적인 제약이 있어
 - 임금과 달리 연금지불약속은 영구적이며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간주돼
 - 그러나 예산 압박이 계속 상승하는 한, 정치인들은 규정과 헌법을 바꾸어야만 할 것
- ▶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은 색다른 문제를 직면

- 하고 있어
- 최종 보수액 기준 연금지불 방식의 소멸은 이들에게 두 가지 큰 위협을 제기해
 - 첫째는 시장의 하락이 퇴직연금을 불안하게 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쌓아놓은 저축액이 남은 여생을 지탱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것
 -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저축을 권장하고 연금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두기 보다는 연금해제를 선택사항으로 두어 근로자의 연금가입을 유도해야 할 것
 - 기본 공공연금은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불행한 노인들에게 충분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금액이 높아야 할 것
 - 이것이 사람들이 70세가 되도록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일 것

2011년 4월 7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8529505?Story_ID=18529505〉

미 국

납세자와 공공분야 근로자 간의 전쟁 Taxpayers versus public-sector workers

- ▶ 미국인들은 미국 전체 사회보장시스템의 재

정건전성에 대한 논의에는 익숙하지만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연금위기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

- 그러나 이미 알라바마주의 Prichard라는 작은 도시는 연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
- 이 위기로 인해 여전히 확정급여형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공분야 근로자들과 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된 민간분야 근로자들 간의 잠재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라
- 민간분야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 연금보다는 관대하지 못한 확정기여형 연금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세금으로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확정급여형 연금 재원을 제공해야 해

- 수년간의 연기금 부족으로 공공분야 연금에는 더 많은 기여가 더 긴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균형예산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연금재정은 높은 세수입이나 서비스 삭감으로 충당해야 해

- ▶ 공공분야 연금 개혁은 본질적으로 어려워
 - 가장 큰 부채는 기존의 피고용자들에게 주어진 권리
 -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철회될 수 없어 - 기존 피고용자들이 미래에 발생시킬 부채도 제한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
 - 캘리포니아 Little Hoover 위원회는 2월에 주지사 Jeny Brown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은 피고용자들의 연금 수령권을 출근 첫날 정해진 방식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혀

▶ 민간분야 고용주들은 연금 지불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반면 공공분야 고용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해 보여

- 지방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새로운 피고용자들과는 확정기여형으로 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것이 연기금에 미칠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려
- 또한 결국 임금의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사투가 예상돼
- 위스콘신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여금의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그들의 협상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막으려 해

▶ 공공 연금의 재정위기는 사실상 과거 정치인들이 마구 뿌린 선일자 수표(post-dated check)의 결과

- 과거 정치인들은 노조와의 결탁에서 미래 연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러한 연금 지불을 위한 기금 적립은 하지 않아
- 2002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연금 적립 비율(연금 자산과 연금 부채의 비율)은 82.3%로 떨어져 기여율(세율)을 높여야 했으나 세율 인상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미래 연금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결정해
- 결국 연기금에 난 구멍을 발견한 시가 구멍을 더 깊이 판 셈

- ▶ 지방정부는 매년 보험계리사가 산정해 준 연금 기여율을 채택해야 하지만 일부 정부는 예산 압박에 직면해 이를 실행하지 못해
 - 결국 이들은 기금의 투자수익과 미래 세납

자들의 기여를 의지할 수 밖에 없어
- 그러나 2000년 이래 주식시장은 정체되어
있고 주정부의 금고도 바닥이 나

- ▶ 마구 발행한 수표가 돌아오고 있어
 - Little Hoover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공공연
금의 기여율은 5년 내 40~80% 상승해야
하며 수십 년 동안 상승된 기여율을 유지
해야 한다고 추산해
 -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총 퇴직연금지불액이
시정부 예산의 18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
비율은 2015년까지 37% 오를 전망
 - 뉴욕에서는 교원연금을 메우기 위해 납세
자들이 지불해야 할 기여금이 현재 9억 달
라에서 2015~16년에는 45억 달러까지 올
라야만 해

- ▶ 납세자들은 정부 고위직의 터무니 없이 높은
연금액과 이들이 최종임금방식을 이용해 연
금액을 부풀리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어
 - 또한 민간분야 근로자가 40년을 일해야 연
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반면 고속도로
경찰 같은 경우 평균 28의 경력으로 50세
에 은퇴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

- ▶ 신용평가기관인 Moody's는 개별 주들이 지
고 있는 총 연금 부채를 산정해 발표해
 - 부채 산정시 Moody's는 각 주정부가 산정
한 연금 적립 비율을 그대로 활용했을 때
하와이의 연금 부채 비율은 GDP의 16.2%
이며 13개 주의 비율은 10%로 그리스와
일본의 100% 이상의 부채 비율과 비교해

볼 때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
정부는 주정부의 GDP를 모두 다 쓸 수 없
다는 데 주목해야 해

- 연방정부가 주의 GDP에서 소득세 및 법인
세를 통해 자기 몫을 먼저 챙기므로 시민
들은 자기 주의 빚 뿐 아니라 주정부의 빚
도 갚아야 해

2011년 4월 7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8433186?story_id=18433186〉

유럽

심각한 슈퍼박테리아 문제에 직면한 유럽 그리고 세계 Europe 'losing' superbugs battle

- ▶ 유럽의 의료전문가들은 항생제에 강한 내성
을 보이는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이 전례
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기존 항생제로
는 현 의료계가 슈퍼박테리아를 이길 능력이
없다고 경고해

- ▶ 매년 EU에서는 2만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
가장 최근의 항생제조차도 무력하게 하는 박
테리아에 의한 감염으로 사망해
 - WHO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

- 현재까지 영국에서는 70건의 감염 사례가 기록돼

- ▶ 영국 HPA는 인도나 파키스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여행객이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다고 주장해
- 만약 수술을 받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경우

라면 적절한 감염통제조치가 취해진 곳을 알아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

2011년 4월 8일 / BBC News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bbc.co.uk/news/health-12975693>〉